

광·전연 창립 첫 단추 ... 공동발전 속도내야

(광주·전남 연구원)

민선 6기 1년 <3> 광주·전남·전북 상생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데 6년이 걸렸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꺼리낌 없이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지역민에게는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다. '2선', '3선'에 나서야 하는 광역단체장들이 그동안 '상생'하며 주위를 배려하기보다는 '상호경쟁'하며 단기간 성과를 내는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선 6기 들어 분위기가 급변했다. 호남권이 영남권에 이어 충청권에도 인구, 경제성장 등 각종 분야에서 뒤처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곧 암울한 '호남 미래'의 전조와도 같았다. 국내 정치 지형에서 호남이 가졌던 위상도 추락하는 등 지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갈수록 높아졌다. 지역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결국 광역단체장들이 얼굴을 맞대고 호남 위기 타개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부터 '상생'을 약속했던 윤정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이후 실무협상을 거쳐 지난해 10월 1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광주·전남 상생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과 이 지사는 시·도민과 출향인사의 정서적 일체감을 회복하기 위해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정책·사업 측면에서 성과를 조기에 내놓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윤 시장과 이 지사는 광주·전남 상생발전 정책을 공동

지단체 호남권정책협의회 6년만에 재개

호남권 상생 합의문에 12개 사업 포함

상호협력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필요

으로 수립하고,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과 연계해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공동 문화관 운영, 무안국제공항 조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빛가람혁신도시, 광주·전남 일원에 신재생에너지단지인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고 '제2의 남도학숙' 건립,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등도 상생발전 방안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은 양 연구원이 최근 법인 해산돼 오는 24일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으며, 에너지밸리 조성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오는 9월 열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광주의 국제이벤트에 전남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도 지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전남에 전북도 합세했다. 호남 상생에 다소 부정적이었던 송진호 전북지사를 이 지사가 설득해 호남권 3개 시·도가 참가하는 호남권정책협의회를 6년 만에 재개

동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5일 오후 전북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

진흥원에서 재가동 이후 첫 회의를 가진데 이어 지난 5월 29일에는 광주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가졌다. 윤 시장 등은 호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12개 협력사업을 포함시켜 추진중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 '2015 광주 하계 U대회 성공개최 협력',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첫 회의를 마친 이들 광역단체장들은 순창 북분자주를 들이키며 스킨십에 나서는 등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곧 지역민에게도 영향을 미쳐 지역 간 갈등과 마찰이 현저히 줄었다. 이 지사는 "호남권 광역단체장이 6년만에 만나고 호남권정책협의회가 8년 만에 재가동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호남은 경쟁사대가 아니라 공동운명체이며, 역점사업을 상부상조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과거 갈등을 보이면서 미뤄둔 광주공항 이전문제 등에 대한 비전 제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지난해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국가정책·사업·예산 측면에서 호남권의 '파이'를 키우는 진정된 의미에서의 '상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거 단체장들도 생각을 있었지만 실행을 하기 어려운 과제를 민선 6기 광역단체장들이 슬기롭게 잘 풀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협력사업들의 해결방안을 찾고 현안들을 자주 만나 논의하면서 상생의 틀을 견고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공동급식 마을 매년 253개씩 늘린다

전남도 2018년 1265개로

사업비 50% 국비 요청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실시중인 공동급식 대상 마을을 매년 253개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에는 1265개 마을에서 공동급식이 실시된다.

전남도는 23일 "지난해 256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 여성 농업인의 가사와 영농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했던 공동급식을 올해는 506개 마을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매년 253개씩 늘려가 2016년에는 759개, 2017년에 1012개, 2018년에 1265개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안이다.

전남도는 이들 마을을 대상으로 1

년에 25일동안 공동급식이 이뤄지는 것으로 간주해 인건비 100만원, 부식비 100만원 등 모두 200만원씩(도비 30% 시·군비 70%)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10억1200만원, 내년에는 15억1800만원이 소요되면 시·군의 부담도 높아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내년부터는 사업비 중 50%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성 농업인들이 농번기에 직접 음식물을 장만하지 않고 한 곳에서 여러 명이 식사를 할 수 있어 좋아한다"며 "공동급식 대상 마을을 확대하려면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北, 우리국민 2명 무기징역 ... 경색 깊어지나

북한이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일인 23일 억류 중인 남한 국민에 대해 극형을 내린 것은 사무소 개소를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최춘길씨에게 무기 노동교화형(무기징역에 해당)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 시작과 거의 동시에 나왔다.

북한은 이들의 혐의를 나열하면서 "북 인권문제를 꺼들고..."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극형 선고가 인권사무소 개소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노동교화소(교도소)에 수감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이다. 수감자가 강도 높은 노동으로 3~5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형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무기징역 선고는 남측의 인권 문제 제기 등에 대해 맞불을 놓는 차원도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전극단 북한대학포츠연맹 회장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와 남측의 '군사적 대결 추구'를 불참 이유로 꼽았다.

북한의 이 같은 초강수는 가뜰스나 꼬인 남북관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남한이 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색된 남북 관계의 실타래를 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

"7월까지 日 답변 없으면 2천만달러 국제 소송"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美 법원에

"생존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이제는 몇 분 남지 않아 시간이 없지만 일본으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23일 오전 11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와 의미 등을 밝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해 진행하는 김형진 변호사는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 등 총리의 의권 표명이 일본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왜곡되거나 축소되는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며 "국제소송을 제기해 일본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과 위안부 피해자 유족 2명은 오는 7월 조속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 촉구를 위해 미스 비시공공업 등 미국에 진출한 일본 전범 기업과 일왕,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 비하한 산케이신문 등을 상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2000만달러(2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다. /연합뉴스



한국전 당시 소달구지

마이크 몰러 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공군참모총장이 한국전 참전 중이던 1951년 경남 진해에서 촬영한 소달구지(왼쪽). 같은 해 진해에서 촬영한 나무하는 어린이. /연합뉴스



'해빙물꼬' 튼 한·일, 관계 정상화 바빠진다

하반기 정상회담 관측

8월 아베 담화가 관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이후, 실질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국 간 행보가 분주해질 전망이다. 과거사 갈등을 빚어온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원년'을 다짐하며 새 출발의 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취

입 후 첫 방일과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의 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수교 기념 리셉션 교차참석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관계에 해빙의 물꼬가 터졌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특히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모두 '새로운 미래'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연내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전망도 무성하다. 위안부 문제의 진전과 종전 70주년 기념 8월 아베 담화를 거쳐 하반기 국내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이를 계기로 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등 구체적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제 관심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양국의 다짐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느냐의 문제다.

우리 정부 역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새로운 한일관계의 미래는 '역사적 기해자'인 일본의 아베 총리에 달렸다는 지적이 많다.

최대 장애물은 역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아베 담화다.

정부는 하반기 중에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다 외무상의 방한, 국장급 채널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위안부 협의를 위한 9차 국장급 협의의 조속한 개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